

#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 2012년 10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2년 9월 22일 ~ 2012년 10월 5일

### 주요 키워드

1.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재추진 : 25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청구하기로 하고 청구인 모집에 나선다고 밝힘. 지난 02년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의료계의 헌법 소원을 기각한 이후 10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임. 의협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의사 진료권 보장을 헌법소원이 이유로 제기.
2.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5일 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되어 복지부가 못매를 맞음. 현재 한국 의료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과 같은 정책들에 대한 비판 쇄도.
3.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 27일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며 불산가스가 누출되었고,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5명이 사망. 이후 피해가 확산되며 피해 증상을 보이는 주민이 확산되고,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정부 당국이 문제를 줄속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1. 보건의료정책

#### ○ 이학영 의원, '2009년 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사고에 따른 보험급여 고지 및 징수현황' 공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이 자료에 따르면, 09년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총 3건에 불과하며 전체 고지액은 446만원으로 징수는 전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구상권 제도는 건보공단이 병의원에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그런데 자료의 사례는 주한미군의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외적 이유로 발생한 의료비를 포함하면 청구되지 않는 금액이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에만 주한미군 사고가 341건이 있었고, 건보공단에 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사고는 94건이 있었지만 보험재정에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건보공단은 아무런 조치도 없으며, 반면 지난 2011년 한국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1만9000여건에 고지액은 312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 1만3000여건(237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했다. 여기에는 '사회적 재해'라고 일컬어진 '용산참사 피해자'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지급된 의료비 구상권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학영 의원의 자료에 반박하며, 주한 미군 관련 폭행 등의 사건 모두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을 엄격히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입원 최다빈도 질병은 정신분열증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2011년 의료급여 통계연보'에서, 3년

간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중 입원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은 정신분열병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병은 병원을 찾은 의료급여 수급 환자의 입내원 건수 1위, 총진료비 1위, 총입원비 1위, 총 기관부담금 1위로 나타났다. 500개 질병군의 입원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기관부담금은 총 7조5000억원으로, 이 중 1조원 이상이 정신분열병 입원치료에 의료급여로 지급되었다. 이 밖에도 상세불명의 폐렴·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장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상위 10개 질병 종목에 2조7000억원 가량(36%)이 지급됐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뇌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음주나 흡연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례화된 국민정신건강 검진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 의료기관 과잉진료 및 과잉처방 증가

이목희 의원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건수와 급여제외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보다 많은 항목을 진료하거나 처방해 심평원에 급여청구한 뒤 조정된 건수는 2011년에 전년 대비 7.3% 증가해 약 2016만건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지급심사에서 급여제외된 금액의 총액 역시 10.7% 늘어나 221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으로 분류된 것들만 포함하고 있는데,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를 합하면 수치가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 ○ 2013년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끝에 0~2세 유아의 무상보육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 대신 소득 하위 70%(4인 가족 기준 524만원 이하)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10만원~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 지급된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바우처를 통한 보육비 지원도 시행돼 전업주부가구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半)일반 바우처가 제공되고, 맞벌이 부부나 장애인 부부 등은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된다.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 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0~2세 무상보육이 7개월만에 폐지되면서 이를 강력히 주장해 왔던 정치권과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농어민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 지원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중 같은 비율의 금액을 지원해,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은 농어민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지원되는 현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제도의 형평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기대했다.

#### ○ 남윤인순 의원, 항생제 내성을 OECD 국가 중 최구 수준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25일, 한국의 항생제 내성율은 조사대상 5종의 다제 내성균 중 4종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내성균인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의 내성율은 72%로 OECD 국가 평균 내성율인 29.73%의 2.4배에 달했고, VRE(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도 미국(74%)에 이어 두 번째인 31%로 조사국 평균의 2.6배였으며, 3rdCREC(3세대 세팔로스포린내성 대장균)는 2.1배, IRPA(이미페넴내성 녹농균)는 1.6배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DDD 기준)은 2008년 26.9에서 2010년 27.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의 항생제 사용량이 21.2에서 19.8로 낮아지는 것과 반대된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발표하는 약제적정성평가의 항생제 사용 지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어서 복지부가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를 만들고,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탈세혐의자료 200만건 방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26일 건보공단이 최근 3

년간 소득을 축소·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60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고도, 정작 이들의 탈세혐의자료 200만건은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05년 소득축소탈루 심사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위원회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탈세 대상건수는 연간 50~6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서는 건보공단과 국세청의 소득신고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건보공단에 신고된 소득액이 해당 지역 업종의 평균보다 절반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 안건으로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고소득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축소신고하거나, 지역가입 대상자 중에 직장에 허위로 취업한 것으로 조작한 경우 등이 다수 있었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신의원은 비판했다.

#### ○ 2013년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 포괄보조방식 도입

복지부는 2013년부터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고 세부사업을 선정하는 내용의 '포괄보조 방식 도입 방안'을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포괄보조란 중앙정부가 예산의 포괄적 용도를 정해주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말하고, 내년부터 시·도 지자체가 직접 해당 지역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선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합하여,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따라 예산을 사업 간 10~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계획 발표

복지부는 제 3차 장기요양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우선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2017년까지 수혜대상을 현재(33만명)보다 17만명이 증가한 5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을 완화(2013년 예산에 3등급 점수 인하 75~53→ 75~51점 반영)하고 치매 노인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낙상 및 치매예방을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양질의 인프라 구축 등을 마련할 방안이다.

#### ○ '애곡된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동아홀에서 각 의료계 패럴로만 구성된 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학교교육평가원 등 의료계 단체 인사들이 참가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OECD 국가별 평균 의사 수를 단순비교해 적정 의사 수를 도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원협회 회장인 윤용선 전문위원은 한국이 OECD의 30%에 불과한 저수가체계에서, 각 나라 의료제도와 특성을 무시하고 의사 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의사의 적정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과, 지역별·지역별·전공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공보의협의회와 의과대학생협의회 역시 의사 증원 주장에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부실대학 해결 등이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1명)의 61% 수준이다.

#### ○ '의사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 주제 토론회

27일 건보공단에서는 위 토론회에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교 정형선 교수와 신현호 변호사는 인구대비 의사수와 공공의료를 이유로 증원을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가까이 늘려야 의료의 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의 질과 수가 인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나누어 보고 소수자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료계 인사들의 엘리트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이해연 학술이사는 의사인력을 현재대로 유지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교수는 인력을 늘려 놓으면 10년 뒤에는 과잉 공급이 된

다며, 지역간 인력 편중을 줄일 수 있는 가산료나 시설 지원료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연 학술이사는 국민들에게 어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하고, 의전원 졸업생 등이 있기 때문에 2014년에는 OECD 평균치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지방의료원 재정적자로 인한 임금체불 증가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27일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의료원은 총 12개에 달하며, 전체 34개 의료원 직원 8597명 중 1687명(19.6%)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12개 의료원 중 최다 임금체불은 강릉의료원으로 35억에 가까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직원 113명의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은 무려 3000만원이 넘었다. 진주, 삼척, 천안, 영월 의료원 등도 체불액 수가 높았고, 특히 강릉과 진주의료원 등은 4~5개월째 월급 한 푼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별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임금체불 의료원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 강원도나 전라남도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임금체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희 의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수익성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시각부터 전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우선 10월 1일부터 어린이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이 확대된다. 하한연령을 삭제하고 보험적용 대상을 늘려 14세 이하 소아 중 7만 7000여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10월1일부터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보험적용 수가 고시),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을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했다. 이로인한 소요재정은 1억7800만원이다. 장애인 가산인정 대상 범위는 기존에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으로 제한했던 것을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로 확대했다.

#### ○ 김용익 의원, 2012 병상수급실태분석 자료 공개

2일 김용익 의원은 2011년 기준 국내 필요한 병상수는 21만7020병상이지만, 실제 공급된 병상은 23만 7274병상으로 총 2만254개 병상이 과잉공급됐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 1000명 당 병상수도 2009년 기준 5.6개로, OECD 회원국 평균(3.5개)의 1.6배에 달했다. 김용익 의원은 규모의 경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병상이 전체 병상의 77.1%를 차지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간 경쟁과 영리적 행태가 심화되고 낭비적 의료비 지출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및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는 본래 비영리법인 병원이 청산될 경우 민법 적용을 받아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시적으로 비영리법인 병원 운영자가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으면서 병원을 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 노인전문요양병원 부당청구 9.7배 급증

이목희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1년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금 시·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청구 명세서 건수가 6만1542건에서 17만3078건으로 2.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당 청구된 금액은 43억원에서 420억원으로 9.7배 이상 늘었다. 이목희 의원은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 관련 병원이나 시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합부로 불법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처벌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 의업단체 및 노동 동향

###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 의대생 단체와 갈등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의대생신문은 지난 21일 '의대생 각성? 의료계부터 각성하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노환규 집행부를 맹비난했다. 주체성과 순수성, 다양성을 지키려는 의대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10일 의대생신문에 실린 '의대생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라는 사설에는, 의협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의대생들이 참여할 것을 의대협에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선배인 전공의들과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들을 압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대생 각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의대생을 계몽과 계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노환규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협의 입장에 반박하는 의견을 게재했다. 선배의사들로서 제도의 문제점을 알게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단체의 리더들에게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닥터플라자 간호조무사 성적 비하 사건 정면 대응 방침

간무협은 지난 22일 시도회장단이 포함된 이사회를 개최하고 닥플 내 간호조무사 성적 비하사건에 대해 닥플 운영자 및 의협회장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 정당 및 대통령 후보, 감사원, 검찰청, 여성가족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정면 대응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협회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내 음란물 제보센터'를 운영하여 제제방안을 강구하고, 음란물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 재추진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 시도

의협은 25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청구기로 하고 청구인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2000년 건강보험법 제 40조 강제지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02년 10월 31일,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리며 기각했다. 현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강제성이 있지만 사회보험제도 관점에서 일정부분 인정되고, 의료인 직업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헌법소원 기각 이후 일정기간(5년~10년)이 지났고,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의협의 행보에 대해 국회 정책담당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7일 의사 대회를 앞두고 내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전과 다른 판결을 내릴 만한 환경의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은 오는 10월 7일 '제 1회 한마음 전국 의사 가족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선출마를 선언한 3명의 후보를 초청하기 위해 접촉 중이며, 불합리한 수가 등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대선주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전국 의사회원 및 의대학생, 의사가족, 대내외 귀빈까지 포함해 3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사윤리 자정선언의 성격을 가진 '착한 손 캠페인'도 진행한다. 병들어 있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의료계가 앞장서서 범 국민적 사회 클린 운동을 벌인다는 취지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의약단체장 의료서비스 보험수가 협상

건보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학협회)은 26일 서울 프래지던트호텔에서 2013년 수가협상을 위한 첫 상견례를 갖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약단체장들은 수가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각 단체의 애로사항을 털어 놓았다. 병협은 지방병원이 저수가와 서울로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고, 의협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진료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

가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도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좀 더 많은 검토를 요구했고, 약사회는 보건의료단체 전체의 수가를 인상시켜주기를 호소했다. 이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수가 협상을 당부했다.

5일에는 병협협회 회관에서 첫 협상을 갖고, 병협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을 본격화했다. 병협은 2010년 이후 병원급의 진료비가 줄어들었다는 점과, 지난해 합의한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이유로 수가를 인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병협은 지난해 환산지수 공동연구, 실폐괄수가제 도입 협력, 병원 경영 투명화 노력 등 세 가지 부대조건에 합의했었다. 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건보재정 흑자를 수가인상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흑자긴 하지만 적자가 깔려 있기 때문에 흑자로 인한 수가 인상은 고려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병원협회의 수가인상률은 1.7% 였으며, 협상 마감일은 17일까지이다.

### ○ 물리치료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최근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 업무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가 철회하지 않자,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간 물리치료사들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한방병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아래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기구를 이용한 치료행위를 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반발해 왔다.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보조 업무는 의료기사법의 한계를 넘는 유권해석이라는 것이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이와 같은 해석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2일 장성태 행정총괄비대위원장이 복지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5일에는 한강에 투신하려고 하다가 경찰의 저지로 실패하였다. 5일 보신각에서 집회를 가진 이들은 유권해석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과 촛불집회를 비롯하여 면허증 반납·관계자 고소·민원제기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5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임원진들이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보조 업무 사수를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물리치료사들이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1만3000여명의 간호조무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에 해당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진료보조권 축소로 인해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달된다고 밝혔다.

### ○ 콜 서베이(Call survey) 제도, 다국적 제약사 영업사원 감시용으로 변질

콜 서베이는 제약사가 시장조사기관(대행사)를 통해 영업사원의 방문(콜) 효율도를 조사하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의사에게 어떤 회사 제품과 어떤 영업사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 동향 및 영업 효율성 조사를 넘어 노동 감시의 기능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콜 서베이 점수로 해당 영업사원을 문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콜 서베이 점수가 낮은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시말서를 작성케 하는 등 업무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한편 영업사원이 소장하고 있는 의사의 명단(개인정보, 환자방문 수 등)이 대행사에 넘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다국적 제약사 측은 업무 효율도 평가를 위한 수단일 뿐 감시 기능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 ○ 한국BMS 노동조합 임금삭감 갈등

한국 BMS제약은 이번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 급여삭감을 진행하고 있다. BMS노조는 27일 회사측이 노동쟁의를 태업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삭감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고 소송 계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MS노조는 지난 7월부터 '임금인상기준 명문화와 불법과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의 고객(의료기관) 방문 회수(실적)를 회사측에 축소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를 태업으로 규정하여 부서별 목표에 미달된 콜 비율만큼 8월 급여를 차감해 9월분 급여에 반영, 지급했다. 노조측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줄이지 않고 보고서상 실적만을 축소했음에도, 태업으로 간주하고 사내 급여규정에도 없는 임금삭감을 감

행한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의 임금지급 기준관련 규정(취업규칙)에 콜 입력 실적을 임금과 연동시켜 놓은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한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 ○ 이화의료원, 파업 28일만에 극적 타결

지난달 5일 파업에 돌입했던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는 2일 오전 10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추석 직전 임무송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중재 아래 진행된 16시간의 마라톤교섭에서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만장 일치로 수용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총액 3.7% 인상(올해 병원계 최고 타결률),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130여명의 사학연금 TO 확보 노력, 만 6세 아동에게 월 7만원의 보육수당 지급, 비용 지원을 통해 직원식당의 질 개선, 노조 소모임방·직원휴게실·바자회 지원,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민형사상 책임 불문·고소고발 취하 등이다. 징계위 노사동수 단협조항 삭제요구는 현 단협을 그대로 유지하되 제도개선 방안 이후 노사동수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공작 실태 전모를 밝혀내고,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노조파괴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후속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다국적제약사 산별노조 11월 공식 출범 예정

4일 10개 다국적 제약노조는 제약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한 일정을 확정짓고, 이달부터 각 회사 노조들이 조직변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별노조의 이름은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으로 정하고, 각사 노조가 민주제약노조에 가입하면 이들 노조는 민주제약노조의 지부가 된다. 참여의사를 밝힌 10개 다국적제약사 노조는 바이엘코리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사노피파스퇴르, 아스트라제네카, 줄릭파마코리아, 한국갬브로, 한국노바티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와이어스, 한국화이자제약이다. 최근 출범한 한국다케다제약 노조도 가입의사를 밝혔다. 민주제약노조는 각 노조의 가입여부를 이달 중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가입노조가 결정되면 11월2일 대의원을 선출하여 노조당 대의원 3명을 기본적으로 선임하고, 조합원이 100명을 넘을 경우 100명당 대의원 1명씩 추가한다. 이후 11월 5일까지 위원장을 임 후보 하고, 11월 20일 '대의원 대회'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여 11월 중에 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 단체와의 공동 교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3. 보건의료 산업 및 질병

#### ○ 한국-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보건의료 협력방안 논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7~22일 5박6일간 UAE 아부다비 병원관리청(SEHA) 대표단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SEHA는 중동에서 가장 큰 통합의료서비스 공급자 중 하나로 현재 아부다비의 모든 공공의료기관 및 클리닉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주요 협의 내용은 한국의료기관의 아부다비 공공병원운영 참여방안,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 및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등이다. 의장단은 2013년에 오픈 예정인 재활병원의 한국의료기관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SEHA와의 보건의료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실질적인 보건의료 협력사업 마련을 위해 진흥원-SEHA 간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 사스 유사 바이러스 발견

영국 보건국은 24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에게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2명의 환자에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됐으며 다른 감염 의심 환자 1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스는 일반적인 감기균 중 하나이지만 매우 다양한 아형이 존재해 2003년 급성 호흡기증후군(SARS)와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사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폐렴과 급성 신부전증을 일으키며, 지난 2003년 홍콩과 중국 등에서 유행한 사스로 인해 8400여 명이 감염되고 916명이 사망했었다. 28일에 WHO는 새로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는 인간 사이에서는 쉽게 전염되지 않는 것을 잠정 결론을 내렸다. 환자 1명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아직까지는 새로운 환자가 나타나지는 않은 상태이다.

#### ○ 초음파영상 진단기기 관련 시장 급부상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초음파영상진단기기 관련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음파영상진단기기는 X선·CT·MRI 등 다른 영상진단기기에 비해 소형이고 저렴하며, 실시간으로 표시 가능하고 X선 등의 피폭이 없는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02년부터 04년까지 외국인 출원(평균 20건)이 내국인 출원(평균 13건)을 1.5배 앞섰지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내국인 출원(평균 97건)이 외국인 출원(평균 22건)을 4.4배로 크게 앞질렀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세계 시장의 약 1.3%인 39억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2%의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초음파영상진단기기는 약 3800억 원으로 국내 의료기기 중 생산실적 1위 품목으로 되었다.

#### ○ 살모넬라균, 에이즈바이러스 타고 확산

영국 캠브리지 소재 생거연구소 연구진은 '네이처 제네틱스' 최신호에 게재한 연구논문에서, 발열·두통·호흡문제 더 나아가 사망을 초래하는 침투성 비장티푸스 살모넬라균은 HIV 확산의 활용에 의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살모넬라균의 출현은 약 52년 전 동남부 아프리카와 35년 전 콩고 분지에서 시작됐으며 아프리카에서 HIV 출현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HIV는 면역체계를 공격하고 기타 감염에 사람들이 더 취약하도록 만들었으며, 장티푸스의 원인균인 '살모넬라 티피뮤리움'은 이런 취약점을 활용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균들은 항생제 '클로람페니콜'에 내성을 나타냈다. 연구진은 아프리카에서 HIV를 치료하는 것이 살모넬라균 감염의 확산을 줄일 수 있지만, 변형 살모넬라균은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가진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4. 제약업계

#### ○ 약국 의약품 자판기 설치 찬반논쟁

경기도약사회 서영준 부회장은 23일 제2회 경기약사대회에 참석해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방안으로 원격화상투약기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 약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구입불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원격화상투약기는 약품 구매희망자가 약사와 화상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약사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제공해야 할 약품을 결정하고 원격지에서 투약기를 작동해 구매희망자에게 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일명 의약품자판기이다. 서영준 부회장은 원격화상투약기 콜센터 운영은 약사회가 직영으로 하고, 약국 폐문 시간대에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일부 참가자들은 일반의약품 편의점 확대 판매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 방안에 대해 찬성했다. 그러나 일부의 참가자들은 자동 투약기가 약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대면 상담을 역행하며, 오히려 이 기계의 설치가 편의점 판매 약품 확대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화상투약기가 궁극적으로 약국이라는 고유한 범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약사의 직능축소 및 소규모 약국들의 파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 한국제약협회-보건복지부, 제약산업 발전전략 후속 조치 논의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김원배 이사장은 24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을 위한 제약산업 발전전략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초저가 낙찰 근절을



위해 제도적으로 약사법에 제조업자의 공급가격을 규제하는 법규를 신설하고, 건설업계처럼 도매상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적격심사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 의뢰를 통해 경쟁입찰 시장에서 초저가 낙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케미칼 신약을 성장동력산업에 포함시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는 방안에도 건의했다.

#### ○ 다국적제약사 국내 복제약 사업 본격화

신약개발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고갈되자, 다국적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국내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화이자는 화이자바이탈스라는 제네릭 브랜드를 런칭하여 14개 제품을 화이자바이탈스 이름으로 출시했다. 최근 스페인 제약회사 라보라토리신파는 한국 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국내 사업 시작을 본격화했다. 제네릭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신파의 전세계 제네릭 매출은 1380억달러(2011년 기준) 수준으로, 다국적 제약사를 제외하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막강한 제네릭 제약사다. 노바티스의 제네릭 사업부인 산도스는 지난 05년 6월 국내 법인인 한국산도스를 출범하여, 매출이 2009년 179억, 2010년 189억, 2011년 201억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 GSK 역시 지난 5월 한국산도스와 정신분열증 치료제 '올란프레서정'의 국내 독점 판매 제휴를 체결했다. 국내에서 다국적 제약사 간에 이뤄지는 제네릭 의약품 독점 판매제휴는 처음이다. 릴리의 '자이프렉스' 제네릭인 이 제품은 산도스에서 2011년 2월부터 '산도스 올란자핀 정'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GSK는 '올란프레서정'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의 판매 및 마케팅을 맡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제네릭 사업에 뛰어들어 이후 실적의 큰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지만, 가뜩이나 몸살을 앓고 있는 제약산업에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경쟁만 심화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반응이다.

####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네릭 의약품 2012년 상반기 개발동향 분석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올해 상반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승인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승인건수는 108건으로 전년 동기(114건)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이중 고혈압치료제 관련 복합제가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년 4월 재심사가 완료되는 고혈압치료제인 '엑스포지정'의 제네릭이 27건으로 승인건수 1위를 차지했고, 이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단일제만으로 혈압조절이 어려운 만성 고혈압 환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심사가 완료된 의약품을 중심으로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위궤양치료제인 '스토가정'의 제네릭인 라푸티딘(7건)과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스트라테라캡슐'의 제네릭인 아토목세틴염산염(5건)이 각각 승인건수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재심사가 완료되는 의약품의 제네릭 개발은 전체의 43%를 차지해,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개발이 여전히 재심사가 완료되는 신약의 복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가장 많이 승인된 당뇨병치료제는 올해 약 7%(8건)으로 전년(34%)에 비해 품목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 ○ 내년 제약산업 육성 예산 3372억 배정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2013년 복지분야 예산으로 올해(92조6000억원) 대비 4.8% 증가한 97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 예산에는 3372억원이 편성되어,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에 200억원이 편성된다. 이는 정부 출자분으로 민간 매칭펀드로 연간 1000억원을 조성하고, 2014년까지 총 2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VC, 기관투자자 자금 유치를 통한 유망벤처 M&A, 기술제휴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약 전문인력 유치 양성에 39억원(올해 10억원)이 편성되어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비용으로 쓰인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는 641억원으로 올해(65억원) 대비 886%가 상승했고, 신약 R&D 투자 확대 예산으로 2472억원이 편성되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R&D 지원 예산으로 80억원을 편성되었는데, 혁신형 제약사들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놓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다. 그리고 혁신형 제약사가 해외인력을 영입할 경우 지원액은 당초 목표액(80억원)의 절반 수준인 39억원이 편성되었다.

### ○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68개 약제 소요기간 및 효능군별 약가 분석 발표

KRPIA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1차 제약업계와의 토론회에서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68개 신규약제의 등재 소요기간 및 효능군별 약가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발표했다. KRPIA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신규 68개 약제의 등재기간은 평균 11개월이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로 결정되고도 건보공단과의 가격협상이 결렬돼 등재기간이 길어지는 약제는 12개였다. 그런데 12개 약제는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높은 질환에 쓰이는 약제로, 약가협상 결렬이 환자의 접근성을 저하했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결렬돼 등재되지 않은 품목 중 계약에 사용하는 '피블라스트스프레이' 등 4개 품목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78개 약제의 가격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 구매력지수(PPP) 기준 평균은 62%였으나, 최소 17%, 최대 137%로 약제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RPIA는 등재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상담 강화와 경제성평가 결과, 약가를 연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토론회에서 심평원은 제약업계가 개선건의한 급여기준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였다. 심평원은 약제 급여기준의 신속하고 원활한 검토를 위해 심사위원 7인으로 '약제급여기준 검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64개 약제 중 10개 약제는 복지부에 급여기준을 개선·건의 했으며, 나머지 약제는 올해 중으로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 ○ 리베이트 적발 의약사 703명 행정처분 대기

김성주 의원은 28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후 총 10명의 의사와 2명의 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고,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약사 등 703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모 제약사에 연루된 의료인이 무려 95명이나 되었고, 이에 김성주 의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몰래 가로채는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중하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장모씨 약가인하 소송 항소장 제출

개인사업자 장씨는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후 포기하지 않고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약가인하 상한 고시는 적법하다고, 약제급여는 제약사가 건강보험체계에 자율적으로 들어가 받는 것이므로 일괄 인하로 사적자치를 침해받는다며 보기 어렵다고 선고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일성신약, KMS제약, 다림바이오텍, 에리슨제약, 장모씨 등 5개 제약사가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 나섰으나, 모두 소를 취하하고 현재 장씨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 PNH(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치료제 '솔라리스' 병당 736만629원 급여 등재

보건복지부는 28일 솔라리스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개정안을 고시했다. 등재된 약가는 병(30m)당 736만629원으로, 회사측(제조사 알렉시온, 공급사 한독약품)과 공단이 리펀드 계약을 맺고 등재한 표시가격이므로 실제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리펀드제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부담 없이 표시가격을 높여주는 약가협상방법이다. 그간 PNH환우회는 솔라리스에 리펀드제도를 적용해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지나긴 약가 협상 끝에 급여등재되었다. 한편 솔라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져 있다.

### ○ 외자사 의존 상위 제약사 수익성 부실

약가 인하 이후 일부 상위 제약사들이 외자사의 품목을 동입하여 외형적 성장을 거두고 있지만 수익성은 좋지 않다. 올해 3분기 상위 8대 제약사의 예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조313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한양행은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한 194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베링거인겔하임의 트윈스타(고혈압치료제)와 트라젠타(당뇨치료제)가 큰 폭의 성장을 거둔 덕분이다. 그러나 수익성은 떨어져 영업이익이 8개 제약사 평균(19.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105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33.8%, 영업이익률(5.4%)은 전년 동기 대비 -4.3%p를 기록할 전망이

다. 대응계약 역시 외자사의 품목을 도입했지만 영업이익(137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가 예상된다. 8개 제약사 합산 예상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2.6% 떨어진 9%다. 제네릭과 도입 품목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영업이익률 10%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5.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일정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5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5일과 8일, 건강보험공단은 9일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1일에는 국립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분당차병원, (주)바텍에서 시찰이 이루어진다. 이어 12일에는 국립암센터, 15일 대한적십자 등,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집중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23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의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 ○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문제제기

김명연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가 복지부의 성급한 성과주의로 재판부에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09년 약가인하 연동제 이후 8개 제약사에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지만, 7개 제약사가 대표성 결여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중 1건만 복지부가 승소했다. 이는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한 결과로서, 김명연 의원은 이것이 복지부의 성급한 성과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가슴기살균제 사망자 정부 발표보다 10배 이상

이언주 의원은 '원인미상 중증폐질환 발생 규모 및 질병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실제 사망자는 102명(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가슴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63명, 시민단체에 접수된 사망자 52명)이지만 정부 공식 발표 사망자는 10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가슴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폐질환 성인 환자는 75명이었으며 이 중 22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18세 미만 청소년 및 소아의 경우 138명의 환자 중 80명이 사망했다. 이언주 의원은 연구 결과가 전염성의 원인이 아닌 특정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한 결과, 해당 물질이 세기관지 주변 폐세포에 손상을 가하며 병변이 나타난 환자와 사망자들만을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특정 화학물질이 가슴기 살균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의료인력 지역 균형 배치 시정 촉구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의료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의 시정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조사 의뢰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평균 178.4명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6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 128.1명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8만7395명 중 30.2%(2만6412명)는 서울에, 20.2%(1만6169명)는 경기도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865명에 불과하고, 대구·경북은 8398명으로 서울과 약 3.1배 차이가 났다. 김의원은 의사인력의 지역 균형 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지적

김희국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진료과목 만큼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실당직법)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전문의가 2명 이하인 곳은 60%가 넘었고, 이런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 당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된다고 전했다.

다. 또 지난 8월 5일 응급실당직법이 시행되면서 중소도시 일부 병원에서는 부족한 전문의 인력 및 재원 문제로 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 또는 응급실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 지역 내 24시간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있는 심혈관질환·외상 등의 질병별 지정병원을 정하고, 정부에서는 지정 병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위급한 환자가 제대로 진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응급의료기관 15개가 지정취소(자진반납 포함)되고 전문의 일부가 응급의료현장에서 이탈(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온콜제도를 통한 당직근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당직근무는 상주가 원칙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온콜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법적 책임 소재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당직전문의 등에 3, 4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배제한 것과 관련, 해당 레지던트들과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은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동일하게 당직 전문의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응급의료기관 중별·지역별·진료과목별 특성 및 의료인력(전문의)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응급진료비 상환 부실로 복지재정 누수

신의진 의원은 '응급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09년부터 12년 6월 말까지 총 86억원(2만442건)이 지급됐고, 그 중 상환은 4억여원(2969건)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37억여원(43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응급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이다.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채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361명이나 되었다. 복지부는 소득 재산 조사 후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있지만, 소송은 144건에 불과하고 납부된 사례도 13건에 그친다. 이에 신의원은 미상환금액으로 인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약사 1명 일일평균 200건 조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의혹

류지영 의원은 약사 1명이 1일 근로기준시간(8시간) 동안 1분도 쉬지 않고, 한 건당 2.4분 안에 조제해야 200건의 조제를 할 수 있는데, 약사 1명에 1일 평균 조제건수가 200건이 넘는 종합병원이 백제병원 등 15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상당수 병원들이 약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약사가 아닌 무자격의 보조원을 채용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입원이 가능한 2147곳의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병의원 의료기관은 103곳이 200건을 넘었으며, 처방건수가 500건 이상인 병원도 5곳이나 된다. 류지영 의원은 보건당국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종합병원들의 원내약국 조사실태를 파악해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 빅5병원 35%로 매년 증가

남윤인순 의원은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0.8%에서 2011년 21.3%로 증가한 반면,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3.8%에서 2011년 29.3%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중 빅5병원 진료비 비중이 2007년 33.1%에서 2011년 35.0%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2501억원으로 이 중 서울아산병원이 9.9%인 7203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삼성서울병원이 7.6%인 5519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6.7%인 4875억원, 서울대학교병원이 6.3%인 4520억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이 4.4%인 3215억원의 순이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비 중 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해온 반면, 의원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외래와 입원 비중이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

관간 기능재정립을 통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신약개발 자금지원 규모 문제제기

김희국 의원은 2020년 7대 제약강국 달성 계획은 현재 수준의 자금지원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08년 이후 복지부가 신약개발에 지원한 총 금액은 2392억원이고, 2011년에는 신약개발 R&D 관련 566억원을 사업단·학교·기업에 지원했다. 그런데 40개 기관에 배분함에 따라 1개 기관에는 평균 14억 원만 지원되었고, 특히 제약사의 경우 평균 7억6000만원 지원에 그쳤다. 김희국 의원은 블록버스터급 세계적 신약의 개당 개발비용이 평균 1조원일 때 현재의 지원수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약가 결정 단계를 개선하여, 건보공간에서 약가를 협상할 때 예측이 불가능한 불공정 협상을 야기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로봇수술 안전성 의문제기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가 로봇수술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간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성 문제는 계속 지적되었다. 다빈치 1대당 가격은 약 30억~40억 원이며 연간 유지비용이 약 2억~2억5000만원으로, 초기 도입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월평균 15건 이상의 수술을 해야 유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9월 노환규 의협회장이 인터뷰에서 로봇수술 사망률이 80%에 이른다고 밝히며 시작되었다. 이언주 의원은 이는 의사가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다빈치와 같은 신의료기술 제품도 정기적 재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긴급지원의료비 환자 임의비급여 청구 실태 심각

위기상황을 맞아 긴급지원의료비를 보조받은 환자에게까지 병원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적발됐다. 김용익 의원이 제출받은 '긴급지원의료비 비급여 심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05개 의료기관 중 88개 의료기관이 환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비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용익 의원은 더 이상 비급여 관리를 늦출 수 없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비급여 영역부터 직권심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보건복지부 산하·소속 기관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

김용익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복지부 본부를 포함한 29개 산하·소속기관 중 14개 기관이 필수조치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은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 할 45개 항목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적용,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 데이터 암호화 등이 주요 항목이다. 복지부 산하·소속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는 동안(11~12년), 총 17개 사이트에서 108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김용익 의원은 민감한 정보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자에도 직원 퇴직급여비 수백억 적립

민현주 의원은 공단이 적자상황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퇴직적립금으로 2009년 654억원, 2010년 687억원을 적립해왔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7년 2848억원, 2009년 32억원, 2010년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현재 재정 고갈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법정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보험급여비 지출이 대폭 증가해 법정준비금 적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퇴직급여비 적립금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것보다 무려 363억원(76.7%)가량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예산·결산서 상에 기입되어 있는 퇴직급여비는 예산 시 과소계상해 결산 시 최대 30배가량 증가했는데, 실제로 공단이 현금화해 충당자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이보다 최소 170억원에서 최대 363억원이나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정부의 회계방식이 아닌 기업회계방식을 사용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장관 역시 퇴직급여비가 어떤 과정으로 적립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 ○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실태 심각

김희국 의원은 요양기관(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상시적 모니터링 및 감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을 실시할 수 있지만, 10년도 복지부 현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관의 약 78%에서 부당금액이 확인되고 있고, 건보공단의 자체 부당청구 환수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의 청구수법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되면서 부당·허위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험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김희국 의원의 주장이다. 요양기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2011년 8만3080개)함에도 조사인력 부족으로 2011년의 현지조사 실적은 842개 기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 보건복지부, 임의비급여 면피용 행정만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절차'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제한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판결 이후 복지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은 여전히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부의 임의비급여 태스크포스는 9월에야 겨우 상건례를 가졌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몇일 남겨둔 상황에서 허가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 평가절차 일원화 고시 행정예고를 추진했을 뿐이다.

### ○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과정 의혹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검찰·경찰·공정위에 리베이트가 적발돼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선정기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에 따른 퇴출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고, 복지부는 현재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금액 등의 범위를 놓고 인증 취소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민 장관은 인증 취소기준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이 대형 제약사에 유리한 쪽으로 배점이 매겨져 소규모 제약사와 비교해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43개 혁신형 제약기업중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제약사는 26개이고, 이러한 대형제약사는 유리성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투입자원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인증되었다는 지적이다.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형 제약사는 배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선정 기준 및 배점 문제를 갖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이러한 기준이 불법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리로 이어지고,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 6. 기타

### ○ 영국 과학저술가 벤 골드에이커, “사악한 제약사” 저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필자의 입을 빌어 거대 제약사들이 환자와 의사들을 어떻게 기만해 왔는지를 자세하게 밝혔다. 저자는 그간 가디언지의 '나쁜 과학' 칼럼을 통해 그간 상식으로 통하던 사이버 과학의 실체를 밝혀왔고, 최근에는 '배드 사이언스'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인 GSK의 부도덕성을 상당부분 밝힌다. 제약사들은 신약을 출시하기 전에 매우 적은 수의, 대표성을 가지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우 엉성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제약사들은 이 과정에서 약효를 크게 과장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항우울제 '레복세틴'이 대표적인 약으로서, 각종 부작용과 같이 부정적인 데이터를 묵살하는 방식으로 약을 처방하였다. 또한 의료와 관련된 많은 행위자

들, 특히 환자들 모임까지도 제약사의 영향권 아래 놓여져있다는 점을 말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콜레스톨 저하제 '스타틴', 항우울제 '파록세틴',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 등의 부작용 등을 폭로하며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를 밝히고 있다.

#### ○ 미국, 태평양 제도 거주민 첫 건강상태 조사

미국 미시건대학 연구진은 LA에서 열리고 있는 하와이 원주민과 태평양 섬 거주민들 간의 건강 불균형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다. 이곳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수 민족이 있는 지역으로, 이번 연구는 사모아인과 통가제도 사람들의 의료 이용과 건강을 평가하는 최초의 과학적 연구이다. 태평양 제도 중 흡연비율은 다른 캘리포니아 사람들보다 3~4배 높았으며 미국 전체보다는 두 배 높았다. 그리고 태평양 제도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이나 비만이었고 성인은 80%에 이르렀다. 한편 의료행위에 대한 접근도가 낮아 성인들은 치과에 갈 가능성이 캘리포니아의 86%에 비해 47%로 적었고 여성의 73%가 캘리포니아 여성 53%에 비해 유방X선 사진을 찍을 가능성이 저조했다.

#### ○ 일본, 석면폐 환자 스트레스 사망 피해보상 인정

일본 오카야마 지방법원은 최근 석면폐로 진단된 남편이 우울증을 일으켜 자살한 사건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낸 츄고쿠 지방에 사는 60대 여성의 손을 들어 줬다. 석면폐 스트레스로 인한 상기 사망자는 1959~78년까지 전국의 공사장에서 석면(asbestos) 분사 작업에 종사해 왔으며 1987년 석면폐 진단을 받았다. 투병 중이었던 2002년에는 우울증으로 진단받았으며 2007년 5월 자살했다. 그러자 부인은 2007년 쿠라시키 노동기준감독서에 유족보상금을 지불하라고 청구했고, 불가판정을 받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우울증 발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이 사례는 향후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 iPS세포 등으로 생성된 난자로 새끼 출생

일본 교토대학 대학원 의학연구과 연구진은 마우스의 배성간세포(ES세포)와 iPS세포(만능세포)로 난자를 만들어 그 난자로 새끼를 낳은 연구성과를 사이언스 최신호에 게재했다. ES세포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마우스 태자(fetus) 중에서 난소가 되는 체세포를 꺼내, ES세포로부터 분화시킨 원시 생식세포와 함께 배양했다. iPS 세포에서는 암컷 태자의 선유아세포로부터 수립한 iPS 세포를 기초로 난자를 제작하는 실험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난자를 암컷 마우스에 이식하여 건강한 마우스를 얻는데 성공했다. ES세포나 iPS세포를 이용하여 정자를 만든 적은 있지만, 난자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구미 불산가스 노출 사고

27일 오후 3시43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산단 4단지 내 화학제품과 화장품원료 등을 제조하는 (주)휴브글로벌 공장에서, 직원들이 20톤짜리 탱크로리에서 공장 저장탱크로 불화수소산(불산)을 주입하던 중 탱크로리의 뚜껑이 갑자기 열리며 폭발했다. 이 사고로 공장에서 일하던 박모(24)씨 등 직원 4명이 숨지고, 이모(49)씨는 중상을 입고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튿날 숨졌다. 이에 유독가스에 노출된 주민 10여명이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유독성 가스와 연기가 계속 확산되어 주민 1500여명이 대피했다. 사고 후 두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폭발현장에서 1만9700ℓ 규모의 저장탱크 밸브가 터진 것을 확인했으나, 이를 즉시 차단하지 못해 군 화학부대의 지원을 받는 등 사고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건 다음날인 28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이 정밀 합동감시에 들어갔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농도 측정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당일 10시에 주민대피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각종 환경단체는 불산은 급성적으로 노출된 이후 만성적인 건강 우려가 있는 물질이어서 노출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처리한 과정은 주민들의 건강보호보다는 사고를 줄속 처리하는데 급급한 행태이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불산은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로 세포조직을 쉽게 통과하며 흡입·섭

취·피부접촉 등 모든 노출경로에 대한 독성을 갖고 있다. 한편 불산 피해로 인해 1일까지 접수한 농작물 피해면적인 150여 ha에 이르러, 각종 농작물이 말라죽는 증세를 보이고 가축들도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2차 피해 확산이 늘어나면서 치료환자가 900여명에 이르렀고, 이에 5일에는 구미시 산동명 주민과 인근 사업자 노동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항목은 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한 노출·증상·질병·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설문 등 5개 분야 37개 항목이고,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로 소변중 불소농도 측정과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